

## 저출생 대응: 통계청의 역할

Column



사회통계국 서운주

“인구”는 경제·사회가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로, 오늘날 심각한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등록센서스를 포함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의 구조”를, 월간 출생·사망 및 국내의 이동통계를 이용하여 “인구의 변동”을,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하여 “인구의 미래”를 작성하고 있다. 이 세 분야의 기간통계는 서로 연계·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보다 시의적이고 정확한 인구 현황을 제시해 준다. 즉 매월 인구동향을 인구구조 통계에 누적·반영하여 다음 해의 인구구조로 재편하고,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출생·사망·이동의 일정 기간 변동 추이를 모형에 대입하여 인구의 미래를 추정한다. 이렇게 구축된 인구통계는 가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 대부분의 모집단이 되며, 인구등록부를 통해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 축으로 기능한다. 통계청은 인구에 대한 이러한 공식통계를 매월·분기·연간 등의 주기로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변화와 청년·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특집·기획 보도를 발표함으로써 저출생 심화와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왔다.

저출생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저출생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는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에 걸친 의제가 되었고, 오늘날 최우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를 비롯한 기간 통계의 작성 기관이자 국가통계 총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첫 번째로 강조되는 역할은 인구통계 작성 주체로서 인구통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시의성을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상주(常住) 개념 인구통계 이외에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2024년 7월)와 시군구별 근무지 기준 취업자 등을 포함하는 「지역활동인구」(2024년 8월)를 각각 개발·공표하였다. 또한 출생아의 등록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부가 출산을 안전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출생통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게 2024년 7월에 작성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현재 구비된 혼인율, 합계출산율 이외에 생애 단계별로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유배우 출산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인구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에 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3년으로 개편하였고, 전국 인구추계 후속으로 내·외국인 및 시도 인구추계 등도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역할은 인구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포착해 나가는 것이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경제·사회적 환경,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의 결과도 인구 자체의 변동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재정수지 악화, 사회적 갈등, 농촌 공동화 및 지역소멸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 노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에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세분화하여 공표하였다. 그 밖에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의향별 이상적 자녀수 통계를 2024년 11월에 신규로 공표하고, 성별·연령별·결혼 여부별 사계절 시간활용 현황 분석 강화, 고립·은둔 통계 상세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역할은 저출생 지표체계를 통한 종합 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평가 시 과학적 증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체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표체계를 “출산현황”, “결정요인”, 출산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저출생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표체계의 대표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차례 듣고,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세부지표 61개를 선정한 뒤 2024년 12월 24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지표체계」에 필요한 구성 지표 가운데 현재 구비되지 않은 세부지표는 필요 통계의 개선·개발 추진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새롭게 대두하는 사회·경제 현상 및 수요를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 범위 확대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협력 및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통계청은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된 저출생 시국에서 정부·기업·개인의 의사결정과 각 기관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정확하고 세분화된 인구·사회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